

탁상 규제로 건설산업 살릴 수 있나

최근 건설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물량 급감과 유동성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가 심각하다. 2월 건설수주는 4조 88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% 감소했고, 건축 부문은 58%나 급감했다.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등 공공 투자를 늘리고, 선금지급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다.

어느 산업이든 경기 침체 시에는 고통이 따른다. 건설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. 원수급자가 어려워 하수급자와 현장에서 직접 공사 참여 중인 장비·자재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다. 그 원인은 공사물량 부족과 실적공사비제도, 저가낙찰에서 찾을 수 있다. ‘갯간에서 인심 난다’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. 원수급자가 최악인 상황에서 하수급자나 그와 거래하는 2차 거래업체의 상황이 좋을 리 없다.

최근 건설업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마른 수건도 다시 짜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중요하다. 거래 당사자 간 반목과 질서가 아닌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. 그러나 건설업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.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.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와 지역전문업체 50% 이상 의무 하도급, 납품단가조정협약제가 새로 도입됐고 하도급대금 직불 강화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정책 추진이 그 예다.

지난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‘건



유승화
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

설산업 선진화 방안’을 발표했다. 건설산업의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.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책목표가 규제강화인지 완화인지 혼란스럽다. 분명한 건 정부의 경제활성

화 노력이 기업활동을 규제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.

공정위의 2008년 하도급 실태조사를 보면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2000년 44.2%에서 지난해 95.3%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. 하도급위반 혐의 업체비율 또한 81.9%에서 43.9%로 급감했다. 특히 한나라당 ‘건설하도급제도개선 TF’의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실제공사 수행에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한 하도급사는 7.8%에 불과했다. 하도급대금 수령 시기는 하도급사의 81%가 법정 기일 내에 받았다고 답했다.

이런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.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일부 업체가 문제이지 규제강화로 대다수의 성실한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. 정부는 손쉬운 규제강화보다는 거래당사자 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. 좋은 품질의 시공물을 생산하고 제1차, 제2차 협력사의 고통을 덜도록 적정 공사비를 주어야 한다. 특히 하수급자로부터 대금지급 보호방법이 취약한 2차 자재·장비업자와 근로자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.